

## 인수위, 농림축산부 개칭은 시대착오적 발상 농축산물 일관관리 체계 유지되어야

편집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1월 22일 정부조직 세부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1차 발표 때와 동일하게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부'로 축소하고, 식품산업 진흥업무를 국무총리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귀속시키고 수산업부는 해양수산부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에 농축산업계는 실망감을 넘어서 배신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7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전국 축산인 한마음전진대회'에 참석해 "축산은 식량산업의 핵심축이자 농촌의 핵심산업으로서 발전했으며, 이러한 축산 정책에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챙길 것이며,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꿔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것"이라는 대선공약을 밝힌 가운데 발표된 내용이라 우리 축산업계의 당혹감은 더 크다.

축산물 안전관리는 1998년 농식품부로 이관된 이후 사육-도축장-가공장-판매 등 모든 단계 일원화로 우리 먹거리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왔다.

미국, 유럽연합,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도 축산식품은 일반식품과 달리 고단백 식품으로 부패가 쉽고, 인수공통전염병이 있어 농장부터 특별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인해 축산식품의 안전관리 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면서 축산업이 반토막이 나고 1998년 이전으로 회귀하게 되어 그동안 'farm to table(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일관관리 체계의 원칙이 한 순간에 무너져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공약대로 농림축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하고, 농축산물 일관 관리체계를 훼손하는 시대적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